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32호
2021. 11. 22

정책동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 업계는 혼란 가중
- 美 인프라 예산 법안 가결, 1.2조 달러 대규모 투자 현실로

산업정보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
- 언택트 시대, 건설업 인력관리 방식 전환

건설논단

- 오징어 게임 같은 GICC를 기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 업계는 혼란 가중

- 건설업계 큰 영향 불가피, 법 시행 시 우려되는 3가지 주요 쟁점 -

■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시행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됨.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의무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쟁점 사항 1 : 명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법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4가지로 구분하며, 이 중 2가지 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4가지 의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② 재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의무, ③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의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175개 조항, 시행령 119개 조항, 시행규칙 24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가 담겨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만 해도 673개 조항으로 구성됨.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16개 조항, 시행령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시행령 제5조에서는 수급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어떤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건설산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건축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매우 다양함.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만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쟁점 사항 2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도급인의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물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제4조의 의무 중 일부는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를 구별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은 도급인이 직접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의무(제38조 및 제39조)가, 수급인이 계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 의무(제63조)가 적용됨.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접 계약관계 유무에 따라 관리 책임이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사업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한 측면이 있음.

■ 쟁점 사항 3 :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서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을 명시하고 있음.
- 중대재해에 적용 가능한 「형법」의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이 5년 이하의 금고,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이상 징역은 과한 측면이 있음.
 - 「형법」에서도 징역의 하한형은 고의범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252조에 따라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임.
-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하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작업중지, 행정제재, 보상,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이를 고의로 계획할 리 없음.

최수영(연구위원 · sooyoung.choe@cerik.re.kr)

美 인프라 예산 법안 가결, 1.2조 달러 대규모 투자 현실로

- 광범위한 인프라 예산 확보, 대중교통 부문에만 899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 규모 -

미 의회,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가결¹⁾

- 미 하원은 지난 5일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수도, 전력 등 광범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내용을 담은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가결 처리함.
 -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3대 대규모 재정정책인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미국구조계획', 인프라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미국일자리계획',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예산 '미국가족계획' 중 두 번째 항목임.
 - 건설·ENG 및 운송 관련 산업에 매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본 법안의 가결에 미국종합건설협회(AGC), 미국도로교통협회(AASHTO) 등 관련 단체들은 본 법안의 가결을 미국 인프라 개선과 교통망 성능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평가함.
- 당초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인프라 예산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법안 수혜지역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통과됨.
 - 대신 인프라 예산 법안과 함께 처리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예산(미국가족계획)의 의결은 미뤄졌으며, 인프라 투자 법안 역시 당초 2조 2,000억 달러 규모로 기획되었으나 1조 7,000억 달러, 다시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감축되어 최종 합의됨.

도로·교통, 통신·유틸리티 등 5,500억 달러, 대중교통 관련 부문에 899억 달러 투자

- 투자예산 중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통신, 발전 등 인프라에 해당되는 예산은 약 5,500억 달러 규모로, 도로·교량에 1,090억 달러, 철도 660억 달러, 대중교통 390억 달러, 공항 250억 달러, 발전 73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책정됨.
 -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한 39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포함한 관련 예산은 총 899억 달러 규모로, 백악관에 따르면 이는 연방정부의 역사상 대중교통 부문 투자의 최대 규모임.
 - 또한, 동 법안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예산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주요 기반시설의 환경 인허가 절차의 단축을 성문화하였음.

1) Ichiniowski T. (2021) 'Hallelujah,' House Finally Approves \$1T Infrastructure Funding Package, Engineering News Record (2021. 11. 5).

<표 1> 인프라 법안의 부문별 신규 투자 예산

구분	세부 분야 및 예산				
교통 부문	도로, 교량	안전	대중교통	철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1,090억 달러	110억 달러	390억 달러	660억 달러	75억 달러
	저탄소 전기버스·페리	지역 간 도로연결	공항	항만수로	인프라 금융
	75억 달러	10억 달러	250억 달러	170억 달러	200억 달러
기타 부문	물 기반시설	광대역통신망	환경복원	발전 및 전력망	기타
	550억 달러	650억 달러	210억 달러	730억 달러	520억 달러

- 해당 법안은 노후화된 물 기반시설, 전력 등 유틸리티와 도로·교량 인프라 성능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상당 규모 포함하고 있음.
 - 백악관에 따르면 안전한 식수 접근성이 부족한 가정은 1,000만호, 교육 및 보육시설은 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물 기반시설에는 550억 달러가 책정됨.
 - 또한, 백악관은 보수·재건이 필요한 교량이 4만 5,000개, 교체가 필요한 대중교통은 버스 2만 4,000대, 철도 5,000대, 역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함.

■ 행정부,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인프라 실행 TF’ 설치

-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효과적인 법안 실행을 위한 ‘인프라 실행 TF’를 행정부에 설치, 인프라 투자 및 고용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프라 사업을 총괄 감독하는 ‘백악관 인프라 조정관’ 직책을 신설키로 함.
 - TF는 내무부, 교통부, 에너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며, 조정관에는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재건한 전 뉴올리언스 시장이 임명됨.
- 본 법안을 통해 미국은 수년간 국가경쟁력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노후 인프라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에선 대대적으로 노후화에 직면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 미국토목학회(ASCE)는 미국 인프라 시설 등급을 2017년 ‘D+’, 2021년 ‘C-’로 평가한 바 있으며 향후 10년간 약 2조 5,00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음.
 - 해당 법안의 통과는 다양한 인프라 성능의 개선과 이에 따른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15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

- 건설생산품 총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추진 필요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주요 내용

-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²⁾ 달성을 국가 목표로 천명하고, 올해 후속 작업으로 구체적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해 10월 18일 최종적으로 2개 안을 심의, 의결함.
 - 2021년 5월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월에 기술작업반 작업 결과를 기초로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감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심의, 의결 후 정부에 제안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됨.
 - IPCC 1.5℃ 특별보고서(2018)³⁾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함.
 -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기존 1안을 제외하고,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기존 2안과 3안 중심으로 구성 →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기존 3안 수정), △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기존 2안 수정) 제시
- 또한,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함.
 - 「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5%p 높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함.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존 연도 → 목표 연도)은 4.17%로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임(EU 1.98%, 美 2.81%, 英 2.81%, 日 3.56%).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여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표함.

2)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순배출 영점화(net zero),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부름.

3)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을 제시함.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

- 첫째, 에너지 전환 부문은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 확대 방향을 수립했으며, 특히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기로 함.
 -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에너지 전환 부문 배출량 제로화. 단, 산업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 (B안) 화력발전 일부(LNG) 유지하여 배출량 잔존,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최근 발전 공기업들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선언함.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7기의 완공 이후 추가 발주 없을 전망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향후 24기의 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급변 탄소중립 시나리오,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반발 등 감안 LNG 발전사업도 일정 부분 위축 예상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플랜트 지속 증가, 수소 또는 수소-LNG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 기반 발전플랜트 프로젝트 새롭게 증가
 - 재생에너지 발전플랜트의 경우 발전 용량 확보에도 불구하고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전력생산 변동성이 크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고비용문제로 SMR 등 혁신형 원전건설 재개도 일부 가능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

- 둘째,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됨.
 - (철강)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배출량 95% 감축
 - (시멘트) 100% 연료 전환(유연탄 → 폐합성수지 등) 및 일부 원료 전환(석회석 → 슬래그 등)으로 배출량 53% 감축
 - (석유화학·정유) 연료 전환(전기가열로 등 도입) 및 원료 전환(석유납사 → 바이오납사 등)으로 배출량 73% 감축
-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건설생산품은 Value Chain상 건설자재 제조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⁴⁾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공단계에서는 탄소배출이 낮아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건설자재 제조업에 비해 용이한 편

4) 준공까지 Value Chain상의 비중이며, 건설생산품 총생애주기상에서는 운영 및 사용단계의 탄소배출이 70% 수준으로 가장 높음.

- 개별 건설기업 단위의 Scope 1, 2⁵⁾에 대한 탄소중립 달성 역시 예외적 경우(호텔, 리조트 등 에너지 비효율 건물 다수 보유 기업 등) 외에는 탄소중립 달성이 타 산업에 비해 양호 전망
- 단, 철강재,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 건설자재 제조기업의 연료 및 원료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탄소배출권 확보 등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으로 중장기적 건설원가 상승 가능. 원가 상승분의 최종가격 반영 미흡 시 영업이익률 하락도 가능

■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

- 셋째,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등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방침임.
 - (에너지 효율 향상) [신축]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100% 및 [기존]그린 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 1+ 100%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에너지설비 및 기기의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약 30% 에너지 절감
 -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로 에너지 2~5% 절감
 - 건물에너지 효율을 위해 향후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건물 관리제도 마련(탄소발생량 명기 등)
-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시나리오의 건설산업 영향은 다음과 같음.
 - 205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100% 달성 목표에 따라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시장의 점진적 증가 전망
 - 향후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대상을 주거용/상업용 이외 공업/농업용 건물, 학교캠퍼스 등으로 확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관련 시장 성장 가속화
 - 기축 건물의 경우 현재 공공부문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이 향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가능하며(향후 법적 근거 및 인센티브 마련 예상), 이 경우 그린 리모델링 시장 본격 성장 가능
 -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가능(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기후환경 영향평가 도입 등) → 탄소중립 개발사업을 위한 전략수립 및 준비 필요
 - 생애주기 관점의 탄소중립 건물 관리제도 실행을 대비하고, Scope 3까지 포함해 탄소중립 내지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는 해외 선진건설기업의 사례에서처럼 탈탄소 선진기업이 되기 위한 중장기 탈탄소 전략(탈탄소 건축자재소재 사용, 저에너지 시공,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추진 필요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5) Scope 1은 보유 또는 직접 운영하는 설비 및 차량의 탄소배출, Scope 2는 보유 또는 직접 이용하는 시설 전기/냉난방 위한 탄소배출, Scope 3는 보유/직접 이용 않으나 구입자재 생산, 판매 제품/서비스의 사용 위한 탄소배출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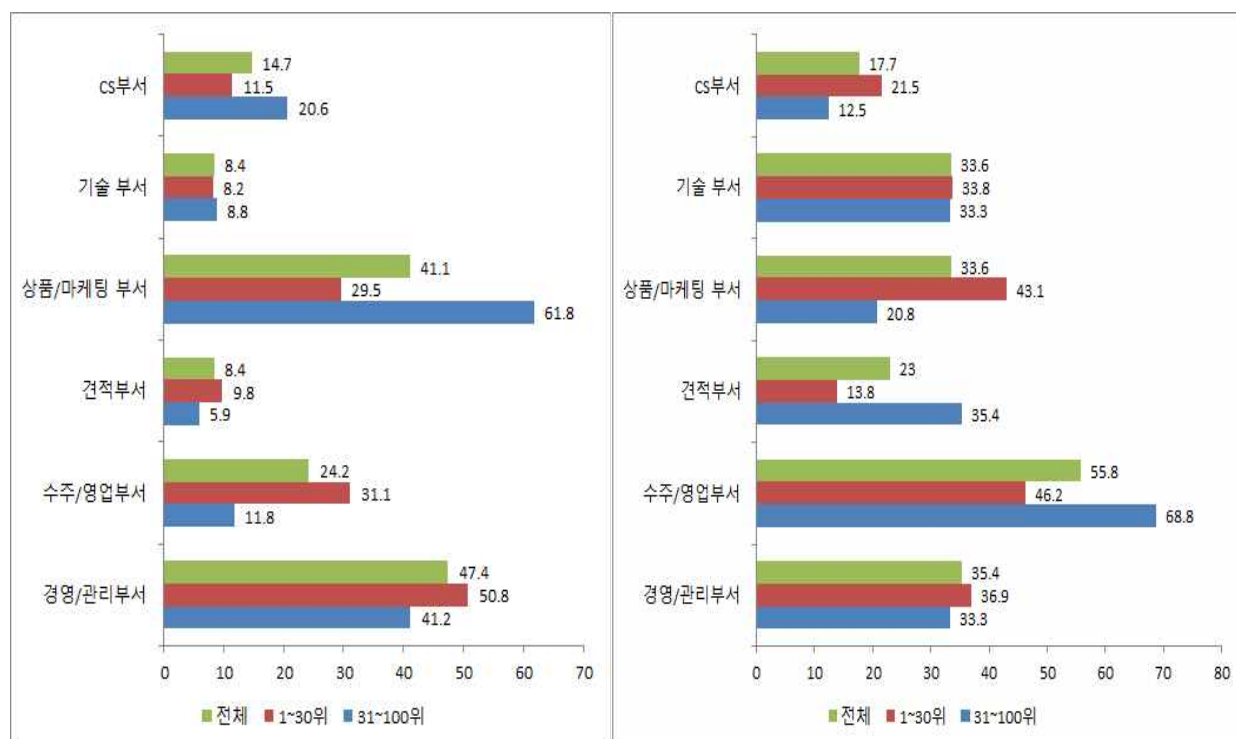
언택트 시대, 건설업 인력관리 방식 전환

- 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지원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 육성이 필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자동화 이슈 부각

-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 간에도 비대면 접촉을 가속화함. 언택트(Untact)⁶⁾ 시대의 비대면 수요 급증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야기, 이에 따라 건설산업 내 인력관리 방식에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2021)에 따르면(<그림1> 참조), 코로나19 이후 건설업체 본사의 기능이 축소될 부서로 경영/관리부서와 상품/마케팅 부서가, 기능이 강화될 부서로 수주/영업 부서가 꼽힘.

<그림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본사의 기능이 축소될 부서와 강화될 부서



주 : 1) 중복응답

2) 본 조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 한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위 이내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 일부임.

자료 : 최은정(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 경영 현안 및 대응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과의 접촉을 지양한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임(네이버 국어사전).

- 한편, 건설현장의 경우 기능인력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직종으로 조사됨. 특히, 현장의 보통 인부는 가장 단순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기술 대체율이 클 것으로 예상됨.⁷⁾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자동화 등의 이슈는 전산 등 기계의 대체가 가장 용이한 업무부터 축소를 가져오는 반면,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 등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의 경우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건설업, 그동안의 인력관리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그동안의 인력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본사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 워크(smart work)’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즉, 지금까지 ‘회사에 나와서 반드시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task(업무)’ 중심으로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건설 현장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따라 건설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지원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즉, 산업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필요함.
 - 단,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스스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1> 업무 특성별 스마트 워크 유형 예

업무 분류	적합한 스마트 워크
외근 위주의 업무	이동근무(이동근무와 재택근무 혼용 가능)
고객과의 직접 접촉(Contact)이 적은 업무	재택근무
고객과의 직접 접촉(Contact)이 많은 업무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원격근무센터 근무
단독으로 하는 업무	재택근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업무	재택근무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06), u-work 표준참조모델 마련 및 단계적 도입 추진 사업 최종보고서.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7) 안종욱 외(2018. 5),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오징어 게임 같은 GICC를 기대하며

텔레비전만 틀면 나온다. 게임을 하는 장면이든 아니든 드라마의 배경 음악이 깔린다. 시쳇말로 대박이다.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관한 이야기다. 블룸버그는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자그마치 약 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넷플릭스가 제작을 위해 254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니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고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인데 이렇게 대박이 난 게 무척 자랑스럽다. 비록 외국 자본이 투자된 콘텐츠지만 기술력은 국산이니 경쟁력이 입증된 거다. 필자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보며 또 다른 대박을 기대하고 있다.

한때 연간 수주 716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50억 달러가 넘는 해외사업을 수주했던 우리 해외건설이 2015년 이후 연평균 수주 규모가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동과 플랜트 수주를 뒷받침하던 국제유가 급락과 주택 시장 중심의 국내 건설시장 성장세 등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해외건설 수주 부진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수주 부진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2021년 V자형 반등에 성공한 세계 경제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해외건설 수주도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해외건설 업계의 큰 이벤트가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가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온라인과 더불어 대면 방식을 혼합해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사만 500여 명이 넘게 참석하고 28개국의 70여 명의 발주처가 참여한다. GICC는 각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비롯해 발주처와 1대1 상담회 그리고 고위급 양자 면담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올해가 9회째인 GICC는 매년 약 35억 달러의 수주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

설 수주 저변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했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정보와 해외 발주처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이해를 얻는 창구 기능을 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이동 제한과 봉쇄로 수주 정보 취득과 영업 등이 어려운 다수 국내 건설기업에는 GICC가 사막을 가로지를 때 발견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사막의 오아시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오징어 게임처럼 투자 대비 거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내실 있는 콘텐츠로 무장한 GICC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해외 유력 발주처와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전자제품의 영역을 넘어 최첨단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처럼 GICC도 해외 건설시장의 내외부 환경 요인 변화는 물론 향후 시장 동향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GICC는 매년 열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수주지원 모델로 정착될 수 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는 백신 확대와 치료제 개발 가속화로 팬데믹(pandemic)에서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고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른 전환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방식을 창출하는 형태일 거다. 해외건설도 다르지 않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외건설 시장 환경과 사업수행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과거의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가득한 GICC가 우리 해외건설의 수주 전략의 중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 난 GICC, 기대해 보자. <e대한경제, 2021.11.12.>